

‘尹 체포’ 절치부심 공수처...경호처 철통방어 돌파 고심

상당한 인력·장비 동원 불가피...“경찰 더 적극적 역할 분담” 연장 체포영장 유효기간 미공개...“성공 위해 수사기밀 유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서 고배를 마신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가 절치부심하며 2차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집행 불발 이후 대통령경호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버스 차벽을 추가 배치하는 등 경비 태세를 강화한 만큼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집행 시점·방법에 관해 “경찰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경찰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짜겠다”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사다리차 차벽을 넘고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을 체포하는 방안, 경찰특공대 장갑차 등 특수차량으로 차벽을 밀고 들어가는 방법, 헬기를 타고 내부 진입하는 안 등 다양한 선택지가 거론된다.

단순히 경호처의 인간띠 차벽을 뚫

고 관저로 진입하는 것을 넘어 체포 이후 윤 대통령을 호송차에 태워 정부와 천청사 공수처로 대령할 방법도 찾아야 하는 만큼 상당히 난도가 높은 작업이 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3일 1차 집행 때 관저 입구에 도착해 차에서 내린 뒤 걸어서 진입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관저까지 가려면 입구에서 400~500m가량 오르막을 지나야 한다.

지난번처럼 경호처가 막아서면 집행에 상당한 경찰 인력·장비가 동원될 수밖에 없어 공수처는 구체적인 집행 전략에서도 경찰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전날 새로 발부받아 연장된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합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첫 발부 때는 이날 6일까지 유효 기간이라고 공개했다.

집행할 수 있는 날짜가 특정되면 경호처가 대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고 정차권이나 윤 대통령 지지자 등 수사 외적인 부분에서도 신경써야 할 사항이 많아지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유효기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박수현 공동대표와 야 5당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괴(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차질 없는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은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의 경우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 발부 여부나 집행 시도 자체가 알려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 앞선 집행 시도가 상당히 특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오 처장은 전날 국회에서 영장 유효 기간에 관한 질문에 “수사 기밀상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수사진하고도 상의했는데 집행의 성공을 위해서도 당분간은 유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등 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7일이다. 판사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7일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연장한 체포·수색영장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색 대

상에 지난번처럼 복수의 장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처장은 전날 ‘윤 대통령이 도망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이 포함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영장 재발부로 시간 번 경찰 ‘체포 작전’ 고민 거듭

집행 시점·작전 강도·인원 등 저울질...“모든 방법 강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연장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가 철조망과 버스 차벽 등으로 무장하며 요새화하는 가운데, 공수처 등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체포 작전의 시점과 강도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일각에서는 체포영장을 다시 받은 만큼 즉각 작전에 돌입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간을 오래 끌수록 대통령경호처 등 상대의 준비도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그보다는 시간을 들여 정교한 작전계획을 세우고 한 번의 실행만으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통령경호처의 수뇌부를 무력화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도 채택 가능한 수가 될 수 있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오는 10일 3차 출석 요구를 했다. 박 처장이 이날도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신청이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입건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함께 받아 윤 대통령 체포와 함께 집행할 경우 경호처의 힘

을 빼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2차 영장 집행에 투입될 인력도 고민 대상이다. 지난 1차 시도 당시 관저로 진입한 공수처 검사와 경찰 등은 경호처와 군인들에 가로막혀 집행이 무산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번보다는 인원을 보강해 영장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시도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경호처는 물론 관저를 지키는 군이 모두 개인 화기로 무장된 인력이기에 기동대와 특공대, 장갑차, 헬기 등 특수장비를 투입해 일거에 제압하는 방안도 경찰 내부에서 거론된다.

하지만 특공대 투입 등은 대규모 유혈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에 경찰로서도 쉽사리 내릴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국가기관 간 충돌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자칫 유혈 사태까지 터질 경우 견딜 수 없는 사태로 치달을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공대 투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지만 이들의 동원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1차 집행 당시보다는 인원을 보강하면서도 형사들이 최소한의 장비만 갖고 투입돼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체포영장 첫 발부	체포영장 연장
협의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영장 청구	2024년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	2025년 1월 7일, 서울서부지법
발부일자·유효기간	12월 31일 발부·2025년 1월 6일 만료	1월 7일 이후 발부·유효기간(통상 7일) 비공개
체포영장 집행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 3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시도(공수처 인력 30명·경찰 인력 120명 등 투입), 경호처 저지로 착수 5시간여 만에 철수·집행 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 집행 가능성 최대화·실행 전망 재집행 시 영장 집행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 공무집행방해 현행법 체포 등 강경 대응 검토
평가 및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정사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첫 사례 경호처 저항 돌파 대응책·수사의지 부족 및 전략 부재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 실패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장 재집행 실패 시 수사 동력 약화 우려 등 무력 충돌 불시한 총력전 관측

하지만 1차 당시처럼 경호처의 격렬한 저항을 뚫지 못한다면 상당한 비판은 물론 ‘수사 실패’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관저 결을 지키는 시위대 등도 작전 수행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 40여명도 관저 앞을 찾아온 바 있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성향 시민과 함께, 현직 국회의원들이 관저 앞을 막아섰을 때를 대비해 경찰이 어떤 타계책을 마련했는지도 관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난관을 뚫고 진입했지만 막상 윤 대통령이 관저에 없을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제3의 장소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윤 대통령의 위치를 계속해서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다쳐서는 안 되니 유희사태 등(이 벌어지는 방식)은 최대한 지양하겠지만, 반드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최대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尹측 “기소·구속영장 청구하라...법원 재판 응할 것”

“어제 대통령 만나” 도피설 일축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한국거래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

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타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분명한 건(공수처의) 권한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권한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물음엔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생각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를 벗어나 도피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제 저녁에 대통령을 만나 뵈고 왔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들은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며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내란죄 철폐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헌재에) 갈 수 있다. 회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출석 문제가 경호나 신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우의장 “대통령 법 집행 거부 참담”

“나라 혼란 빠뜨리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돼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들을 바라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 의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라는 사안의 본질은 절대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여야의 정치 갈등이나 진보·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지 갈림길에 서 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 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국정 안정이고 대외 신인도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경호처 간부 전부 출석 불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관여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8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 차장에게 1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에게는 오는 11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모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연합뉴스

‘내란·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부결...자동폐기

‘살값 폭락시 정부 매입’ 양곡법 등도 부결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쟁한 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

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군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부결됐다.

이들 6개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